

# NEWS LETTER

2025-12-31

## Legal Issue

- AI 에이전트 도입에 따른 법적 이슈

## MINWHO News

- 법무법인 민후가 대리한 쿠팡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 기각 결정으로 서울경제 보도
- 양진영 변호사, TAS 2025에서 'AI 법률 서비스가 법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박영수 변호사, 개인정보위원회 마이데이터 설명회에서 'PDS 기반 개인정보 활용 방향' 설명

## Business CASE



## Legal Issue

### AI 에이전트 도입에 따른 법적 이슈

김경환 대표변호사

인공지능(AI) 에이전트(Agent)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소프트웨어(SW) 개체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자동화 도구를 넘어, 예측하고 학습하며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기술과 구별되고, 이 자율성과 재량적 판단 능력은 근본적인 법적 논의를 촉발시킨다. 산업 효율성 증대, 개인화 서비스 제공 등 AI 에이전트가 가져올 혁신은 막대하지만, 이러한 자율성과 예측 불가능성은 현행 법체계가 상정하지 못했던 심각한 법적 과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첫째, AI 에이전트가 갖는 자율성과 재량적 판단 능력로 인해서 단순한 도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부터 논의가 있다. 참고로 AI 자체에 '전자적 인격'과 같은 제한적 법인격을 부여해 독자적인 책임 주체로 삼으려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둘째, AI 에이전트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그 효력 문제다. 관련해서 2024년의 UNCITRAL 자동화된 계약 모델법(MLAC)은 AI 에이전트 등 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비차별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 어떤 상황에서 착오 취소, 기망 취소 등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정리돼야 하는 과제다.

셋째,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쟁점은 단연 책임의 귀속 문제다. AI 에이전트가 자율적 판단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법적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하는가? AI를 활용한 사용자 혹은 제조사인가?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행위자의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AI 알고리즘의 복잡성, 비결정성, 그리고 '블랙박스(Black Box)' 특성으로 인해 특정 손해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참고로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은 SW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넷째, 다음으로, 프라이버시와 해킹 문제다. AI 에이전트는 고도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데이터 규제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또 자율적인 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당초 목적 외로 활용되거나 프로파일링에 사용될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해킹되거나 오작동할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의 대규모 유출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보안 및 감독 체계가 요구된다.

다섯째, 지식재산권 및 공정성의 문제 또한 중대하다.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돼야 하는가?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므로, AI 생성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 나아가,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된 AI 에이전트가 채용, 대출 심사, 법률 자문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특정 집단에 불리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존재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오류를 넘어, 헌법상 평등 원칙과 직결되는 심각한 법적 문제다.

여섯째, 사람의 로그인이나 클릭을 전제로 하는 구시대적 형법·정보통신망법 조문으로 인해서 AI 에이전트 사용이 접근권한 위반이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AI 에이전트 기술의 발전 속도를 현재의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규범적 발맞춤이 필요하다. 이것이 혁신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 본다.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2-3425  
oalmephaga@minwho.kr

## MINWHO NEWS

### 법무법인 민후가 대리한 쿠팡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 기각 결정으로 서울경제 보도

**법무법인 민후, 쿠팡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 대응...경업금지 한계 짚어 기각 결정 이끌어**

쿠팡이 '로켓배송' 개발에 참여한 핵심 인력의 이직을 제한하기 위해 전직금지 및 유인행위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피신청인들(전직 임직원)을 대리해 사건에 대응하여 법원으로부터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양 사의 사업 구조가 서로 달라 실질적인 경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고, 단순히 업무 과정에서 정보를 접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을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전직금지 사유로 연결하는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민후는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려면 합리적인 보상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고액 연봉이나 보너스만으로는 퇴직 이후 직업 선택을 제한하는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전직 제한의 범위와 기간 역시 과도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인력의 전직이 쿠팡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로켓배송 관련 기술 역시 공개된 개념에 가깝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직금지 및 유인행위 금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기술 보호를 이유로 경쟁사로의 인력 이동 자체를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법리적 한계를 명확히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MINWHO NEWS

### 양진영 변호사, TAS 2025에서 'AI 법률 서비스가 법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양진영 변호사, TAS 2025에서 'AI 법률 서비스가 법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The AI Show 2025(TAS 2025)'에 참석하여, 법조계 전문가들과 AI 기술 확산이 법률 시장에 제기하는 주요 쟁점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AI 법률 서비스가 법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디지털 격차'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사들이 AI 법률 서비스와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문제로 법률 서비스 시장의 독과점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리걸테크 시스템의 불투명성, 할루시네이션 현상,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AI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는 업무 효율성 제고, 인건비 절감, 법률 서비스 품질 개선이 언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격차가 심화되는 원인으로 대형 로펌과 개인 변호사 간 기술·자본 투자 능력의 차이, 양질의 법률 데이터 확보 격차, 데이터 엔지니어 등 전문 인력 구성의 불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구독형 AI 서비스의 대중화로 개인 변호사들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AI 플랫폼을 통한 고객 확보 채널 확대와 법률 서비스 품질의 일정 수준 평준화로 격차가 일부 완화되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양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를 공정성 훼손으로 단정하기보다는, AI 도입에 따른 법률 시장 재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향후 리걸테크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이 보유한 리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다양한 AI 법률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MINWHO NEWS

### 박영수 변호사, 개인정보위원회 마이데이터 설명회에서 'PDS 기반 개인정보 활용 방향' 설명

#### 박영수 변호사, 개인정보위원회 마이데이터 설명회에서 'PDS 기반 개인정보 활용 방향' 설명

법무법인 민후 박영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열린 마이데이터 기자설명회에서, 개인정보 이전·활용 구조 변화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안전성 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전송요구권 적용 범위를 기존 일부 산업에서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강화된 보안 요건을 적용해 대규모 데이터 이전 과정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산업계에서는 데이터 집중에 따른 해킹 위험과 기업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크래핑 활용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생성 정보의 전송 대상 제외, 권리 침해 우려 시 전송 거절 가능 등 제도적 보완책을 통해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박영수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변화로 PDS(개인데이터저장소) 도입을 꼽으며, 온디바이스 환경을 통해 개인만 접근 가능한 데이터 관리 구조가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이전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개인이 데이터를 직접 통제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송 방식의 표준화와 API 기반 전환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기술적·법적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Business CASE

### 이달의 주요 업무사례

1. 물류배송 시스템의 핵심 개발자 이직 분쟁에서 개발자 대리하여 승소 (쿠팡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2. 프로그램 자동화 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 이끌어 승소
3. 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고객 빼가기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피고 대리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원고 청구금액 약 80% 감액)
4. 소프트웨어 소송 - 개발 지연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대리해 청구액 93% 감액 승소
5.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반환 합의 이끌어 승소
6. 제조기업에 모방 제품 유통 중단 관련 경고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7.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상장주식 보유 관련 공시의무 검토 자문 제공
8.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 저격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 및 운영규정 법률자문 제공
9. 임직원 대상 스톡옵션 부여 관련 정관 변경 및 해당 건의 임시 주주총회 처리 가능 여부 등 법률자문
10. 광고·홍보 대행사에 AI활용 콘텐츠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 및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법률자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 타워 역삼 11층

**Tel.** +82-2-532-3483 **Fax.** +82-2-532-3486

[www.minwho.kr](http://www.minwho.kr)



[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주요 업무사례 바로가기]



[전화 상담 바로가기]



[카톡 상담 바로가기]



[홈페이지 상담 바로가기]



[이메일 상담 바로가기]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민후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및 소식 자료로, 모든 법률적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민후에 있으므로, 무단 배포, 복사, 게재를 금합니다.